

기사내용보기

▶[세계일보] 2001-08-16 (외신) 기획.연재 09면 40판 1317자

남북한-중 3각연대 '日 과거청산하라' 촉구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일본 성토장으로 탈바꿈했다. 한국과 일본의 NGO(비정부기구)와 북한 중국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책임 인정과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그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일부 각료의 신사참배 등 과거청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일 NGO, 한 목소리 비판=이날 대일(對日) 성토 분위기 조성에는 한국과 일본의 NGO가 일익을 담당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인권 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를 대표한 **조시현**(趙時顯)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법적책임 불인정에 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아시아여성인권협회의회의 요시다 노리히로 간사도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는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국제화해동우회(IFOR)와 일본화해동우회(JFOR)는 전쟁과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는 물론 성노예 유사행위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인권소위에 건의했다.

◆한-일 전문위원단 맞대결서 완승=한-일 양국의 전문위원이 정면대결을 벌여 장내외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 제네바와 유엔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박수길씨와 요코다 요조 일본 도쿄 대학 교수(국제법)는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전개했다.

박 위원은 군대위안부와 관련, 배상 등 유엔의 권고사항과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본 등) 나라에 대해 인권소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요코다 위원은 이에 대해 군대위안부에 관한 배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기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완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요코다 교수는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일부 역사교과서에서 삭제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교과서 발행인이 이를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혀 역사교과서 왜곡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북한-중국도 일본 맹비난=북한대표는 이날 "어느 나라든지 (군위안부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인권소위는 반인륜적 범죄 당사자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판 구오시양 대표도 일본이 독일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위안부,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이웃 국가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김환기기자 kgkim@sgt.co.kr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닫기